

이덕일의 '역사의 창'



사람과 하늘은 통해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라는 '한(恨)의 정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이 끝나 올 바른 곳으로 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만든 내면의 울음이 한(恨)이라고 생각한다.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댈 최후의 보루는 하늘이다. 하늘이 이런 나쁜 세력들에게 천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만든 사자성어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만절필동(萬折必東)도 마찬가지다. '순자'(荀子) '유좌'(宥坐)에 "강물이 만 번을 꺾이지만 반드시 동으로 흐르는 것은 굳은 의지와 같다"(其萬折也必東 似志)는 말에서 나왔는데, 황하(河水)가 만 번을 꺾이더라도 끝내는 동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일도 끝내 순리대로 흐른다는 것이다.

조선 중기 유학자 이현일(李玄逸·1627~1704)이 지은 '인산서원'(仁山書院)이라는 시에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지만'(天網恢恢)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하늘 그물이 넓고 넓어서 성겨 보이

지만 빠져나갈 수 없다"(天網恢恢 疎而不漏)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무고하게 귀양 갔다가 임금이 밝게 살핀 덕에 마침내 무죄가 밝혀져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하늘의 역할을 대신하는 임금이 무도할 경우 무력으로 내쫓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제왕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모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제왕의 절대성은 인정하되 그 제왕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서 제왕을 통제한다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나라 동중서(董仲舒·서기전 179~서기전 104)가 만든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다. 천인감응설은 사람, 특히 군주의 행위는 하늘과 직접 통해 있어서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는 논리다.

그런데 동중서의 천인감응설이 현실에서 가장 큰 위력을 떨쳤던 나라는 조선이었다. 조선의 임금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인재가 발생하면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정사에 잘못이 없는가를 되돌아보는 '공구수성'(恭懼修省)을 했다. 재변 중의 재변은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었다. 조선의 수령들은 수령 7사라는 일곱 가지 구체적 임무가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일이었다.

태종 15년(1415)에 목민관(牧民官: 지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면서 경내에 한 명이라도 굶어 죽으면 다른 일에 치적이 있어도 곧바로 파직시키는 것을 길이 항식(恒式: 늘 따라야 하는 법칙)으로 삼은 것이 이를 말해 준다.(태종실록 15년 7월 10일)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백성이 있으면 지방관은 큰 처벌을 받았다.

세종 즉위년(1418) 9월에도 호조에서 "만일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으면 감사나 수령은 사헌부에서 통정하게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장계를 올리자 그대로 따랐다. 현(縣)을 다스리는 현감은 관내에서 굶어 죽는 백성이 나오면 사헌부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했고, 감사(도지사)까지 수사를 받아야

했다. 굶주리거나 굶어 죽는 백성들이 있으면 하늘을 움직여 임금을 갇아 치우거나 왕조까지 갈아 치운다는 천인감응론에 따른 정책이었다.

만약 조선에서 무려 403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 같은 대참사가 발생했으면 임금부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처절하게 반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반성은커녕 세월호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지 못 하게 하는 악한 정치를 계속하다 결국 대통령이 중도에 쫓겨나서 옥에 갇히고 핵심 권력자들도 대부분 투옥되었다.

가슴에 깊은 한이 새겨졌던 세월호 유가족과 5·18 유가족들의 한이 조금은 풀렸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천인감응론이 작용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집권세력의 속마음이 그렇다면, 화려하게 첫 수를 둔 검찰개혁도 결국 새정부의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는 진용짜기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한가림역사문화연구소장>

커피 원장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4대강 감사는 복수(復讐)인가

에 대한 복수라는 것이다. 둘째는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던 문대통령이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만약 문대통령의 이번 지시 내지 권고 가 이명박 정권 혹은 이명박이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면 으스스하다. 이성적으로는 '국민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 그 집행과정을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발표에 동의하지만 감정적으로는 'MB, 이젠 혼나겠구나'하는 느낌을 안가질 수 없다.

인간은 복수할 일은 해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이라 복수는 정의의 실현이었다. 벤 히가 멧살리를 전차 경주에서 이길 때, 암굴왕(暗窟王) 에드몽 단테스가 자신을 감옥에 보낸 친구 세명을 차례 차례 복수할 때 우리는 통쾌하다. 근대국가의 형벌이란 것은 결국 사적 복수를 국가가 대행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4대강 감사가 복수시비에 휘말리는 건 결국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문대통령이 '국민통합'이라는 모순적 가치를 내걸면서 이미 예고되었던 시비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연설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정치적 반대파들에게 불의의 일격을 날린 것이기 때문

이다.

이번 감사지시가 '적폐청산'의 제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을 사법적으로 단죄하기엔 장애물이 많다. 먼저 넓은 의미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넘어서야 한다. 4대강 사업은 2013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 중앙지검 형사 7부가 훔았던 적이 있다.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이 주 수사내용이었다. 해당자들은 민간업자들 뿐이어서 이번에 새로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기소할 수는 있다. 문제는 우리국민의 또 다른 절반인 보수층이 이를 일사부재리 위반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헌법 위에 법감정'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빠져나간다. 예견되는 형법조항이 직 무유기죄 배임죄 뇌물죄일 텐데 직무유기죄 시효는 5년, 배임과 뇌물죄는 7년이다. 1억 이상 뇌물죄만 10년인데 감사 들 말을 빌면 가장 어려운 게 뇌물수사다. 만약 이명박 전대통령 개인의 비리가 발견될 경우만 재임기간을 제외하니 시효가 살아있는 셈이다. 호사자들은 그래서 이번 감사의 목표가 결국 MB개인 사법 처리일 거라고 말한다.

둘째, 대통령의 감사원 독립보장약속

과 감사지시 사이의 모순도 짚어볼 일이다. 알려진 대로 이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놓고 독립성을 함께 명시한 헌법조항의 이중성과 직결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전 정권, 전전 정권 하에서의 감사가 미진하다고 느껴 감사를 지시한 건 하등의 사뭇거리가 아니면 서도,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한 문대통령의 약속을 허언으로 들리게 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집권세력의 속마음이 그렇다면, 화려하게 첫 수를 둔 검찰개혁도 결국 새정부의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는 진용짜기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나는 이번 감사지시의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가 밝힌 취지가 담백한 진실이기를 믿고 싶다. 22조원 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서둘러 추진되었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면 최소한 정부 만이라도 이 같은 과오를 피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의 합법성을 재조사하는게 맞다. MB의 범죄연관성과 처벌여부는 그 다음 얘기다. 적폐를 청산하면서 국민통합을 함께 이뤄야 하는 문대통령으로서 고민이 있겠지만 복수국 시비가 두려워 진실을 덮고 갈 필요는 없었다.

기고



김은희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우리 앞에 다가 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안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국가적인 화두가 되었다. 이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뉴스거리가 매일 지면을 장식한다.

그렇다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그 핵심적 요지를 보자. 많은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초지능화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IT기술이 다른 영역의 기술, 산업과 융합되고 활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3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 생물학적 세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 융합에 그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많은 전문가가 한목소리로 예견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의 속도, 규모와 범위, 영향력이 우리가 겪어 온 3차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클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나 정부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일찌감치 공론화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앞선 1, 2,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 시대가 열린 지 수십 년, 길게는 백 년 후에 그 시대의 본질이 정의되었다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은 그 혁명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

화되기 전부터 명명되고 거기에 장밋빛 전망이 넘쳐난다.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의 이면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해 줄 새로운 성장 동력의 잠재성에도 그 이면에는 그들도 있다. 열려의 목소리 그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변화일 것이다. 자동화, 지능화된 기술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이로 인한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우려가 아니라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제안자들도 노동시장과 직업군의 거대한 소멸을 한목소리로 예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IT 중심의 기술 혁명으로만 이해해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구축은 불가능하다는 중요한 반증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진정한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의 문화와 복지를 위해 서비스'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새 직종들이 출현해야 하며, 일자리 생태계의 새로운 전진배치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와 융합 네트워크가 이를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내세웠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술의 육

성만큼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체계적 접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또 하나의 의심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의 경쟁력이다. 인공지능 알고고와 엄청난 데이터를 지닌 구름을 비롯한 IBM,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원천기술과 축적된 경험, 거대 자본이 있는 기업에서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국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쩌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얼마만큼 보유하게 될 것인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구조는 기업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도 도처에 그런 징후들이 발견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개인은 더 이상 기존의 개인이 아닐 것이다. 적절화된 정보와 네트워크로 무장된 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능력이 수십 년 전의 한 기업의 능력을 앞지르는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른다. 3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우리가 과거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나사의 과학자들이 사용했을 법한 컴퓨터의 기능을 훨씬 능가하는 컴퓨터를 호주머니 안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듯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듯이, 인간에 대한 사회, 정부의 투자가 더 이상 먼 미래로 미룰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社說

미국, 5·18 발포 명령 알고도 묵인했다니

어제 오후 광주시청에서는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한 미국 저널리스트 팀 셔록(T66)이 주도했다.

이날 팀 셔록의 발표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미국이 발포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두환의 신군부가 미국에 거짓 정보를 흘린 뒤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 했다는 사실이다.

1980년 5월27일 작성된 '미국 국방부 정보보고서'에는 "군중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각 집을 돌며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집에 불 질러 버렸다"고 위협하고, 폭도들이 초등학생들까지 강제로 차에 태워 길거리로 끌고 나 왔다고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신군부가 한미연합사의 미국 쪽 군사정보 통에게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군부가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 참여를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으로 강제 동원한 것으로 왜곡한 사례"라는 분석이다.

팀 셔록은 지난 4월10일부터 지금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그가 기증한 3500

쪽 분량의 기밀문서 분석 작업을 해 왔다. 그는 1980년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정보를 1996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또한 1980년 5월21일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광주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어찌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문서에는 "공수여단은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팀셔록은 "미국이 1980년 5월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당일, 발포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시 확보했던 기밀문서의 내용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발포 명령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말처럼 30년이 지나 이미 기밀이 해제된 미국 측 문서를 정보공개법에 의해 요청, 이를 분석함으로써 5·18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문재인 정부도 5·18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데, 정부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 기밀문서에 담긴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영산강 하굿둑 개방 검토할 때 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죽음의 강'으로 변해 가는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기 위해선 하굿둑 개방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영산강 축산보의 상시 개방만으로는 영산강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엇그제 4대강 6개 보(堰)에 대한 상시 개방 지시를 내렸다.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가 강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2년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22조 원을 들여 강바닥을 파내고 4대 강 물길을 가로막는 16개 보(낙동강 8·한강 3·금강

3·영산강 2)를 건설했다. 이후 영산강은 녹조로 뒤범벅이 되는 등 오염이 가속화됐다. 지난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서울대에 의뢰해 4대강 사업 전후 영산강 퇴적토 상태와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비정상상태. 승촌보와 축산보 상류 지점 퇴적물에 함유된 구리·납·비소 등 중금속 농도는 사업 전인 2009년보다 최대 34배까지 증가했다.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선 생태계·수자원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의 개방 수준을 정하는 게 순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하굿둑 개방 방안 등 종합적인 영산강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감동, 감동." "눈물, 콧물 다 짜냈네요." "대통령 기념사 듣고 눈물 흘리는 날이 오다니." 지난 5월 18일, '카톡'에 불이 났다. TV로 광주민주화쟁 37주년 기념식을 시청하던 지인들의 반응이었다. 일 때문에 TV를 볼 수 없던 나는 "대체 이번 기념식은 어떤 모습이었던 걸까?"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여성'을 인아 주는 사진은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다. 정말 잘 아는 누군가를 꺼안듯, 대통령을 자연스레 꼭 끌어안은 그녀의 '손'에 특히 눈길이 갔다.

기념사

형상에 간 어떤 이는 묘비마다 놓여 있던 대통령 이름의 생화가 인상적이러마 사진을 올렸다. 그 다음 날, 5월이면 묘비 앞 중국산 조화가 늘 마음에 걸렸었다는 유족의 말이 기사화된 걸 보면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기념식 영상을 돌려봤다. 포용의 주인공은 1980년 5월 18일, 자신의 생일날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김소형 씨였다. 대통령의 포용이 국민의 아픔에 손 내밀고, 마음을 열어 준 것이었다면 기념사는 '오월 광주 정신'의 계승을 약속한 의지의 표현이었

다. 글도 '명문'이었지만 단호한 대통령의 목소리에서 울림과 감동이 더했다. 대통령이 박관현·이한열·표정두·박래전의 이름을 부를 땀 문익환 목사가 이한열 추도식에서 수많은 열사들의 이름을 호명하던 모습도 떠올랐다.

기념사는 '글'로 먼저 봤다. 지인은 전문을 복사해 음미하며 다시 읽어 봤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전문을 타이핑해서 읽어 봤다 했다. 연설을 듣고 울고, 글을 읽다 울고, 관련 기사를 읽으며 또 우노라 정신 없었다고도 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 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위로와 상식과 정의가 사라져 가는 시절, 기념사 마지막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기념사는 형식적인 것. 외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었다. 대통령이나 기관장의 기념사라면 더욱 그랬다. 이젠 기념사가 국민,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근사한 경험이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우편물 유통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